

핵무기금지조약과 핵비확산조약, 그 상호관계

번역 : NPT & TPNW 연구모임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핵보유국을 중심으로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여러가지 반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된 주장은 핵무기금지조약이 핵비확산조약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핵무기금지조약이 오히려 핵비확산조약의 이행을 가로막거나 그 목적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발의하고 사회진보연대 등 3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국제서명운동을 돕기 위해 번역한 글이다. 영어 원문은 'The TPNW and the NPT'(The Reaching Critical Will, 『2019 NPT BRIEFING BOOK』 19~21쪽)이다.

핵무기금지조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핵비확산조약과 핵무기금지조약 사이에 잘못된 긴장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핵무기금지조약은 법적·실제적 의미에서 핵비확산조약과 상호보완적이다.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은 모든 핵비확산조약 당사국들이 2010년 모든 핵무기 사용의 “재앙적 인도주의적 결과”에서 표명한 깊은 우려에 대한 논리적이며 필요한 대응이었다.

핵비확산조약은 핵군축 시한과 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무기 체계에서 보듯, 금지는 제거를 촉진한다. 핵무기 금지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중대한 첫걸음이다. 핵비확산조약 제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핵군축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은 모든 국가의 책임이다. 핵무기의 절대적 금지를 향한 모든 조치는 핵비확산조약과 완전히 일치하고, 제6조에서 언급된 “효과적 조치”에 해당한다.

핵군축 진전의 결여는 일부 국가들의 핵무기 현대화, 그리고 핵무기가 안보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서 핵무기 확산을 막는 것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핵무기 금지는 핵비확산조약이 직면한 모든 난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비확산체제가 직면한 많은 우려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핵비확산조약은 핵무기를 금지해야 할 논리와 의무를 모두 제시한다. 핵비확산조약은 핵확산 방지 및 군축 달성을 위한 동기로서 핵무기 사용이 가져올 재앙적 결과를 강조한다. 핵비확산

〈편집자 주〉 ‘NPT & TPNW 연구모임’은 2020년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참가와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서명운동을 위해 구성된 프로젝트 팀이다. 평통사 상근자들과 청년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 :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핵무기의 완전 폐기라는 공통의 인식에 기반하여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 위협을 불법화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2017년 7월, 유엔에서 채택되었다.

핵비확산조약 (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1968년 7월 56개국에 의해 체결, 1970년 3월 발효되었다. NPT는 핵보유국(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는 핵무기 이전금지(1조)와 핵군축(6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핵비보유국에게는 핵무기 제조 및 획득 금지(2조)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3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차별적인 의무 부과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가 강제 조항이 아니며 IAEA 사찰 의무도 없다는 점에서 NPT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핵비확산조약 제6조: 조약당사국은 조속한 일자 내의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군비축소를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교섭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조약은 특히 군비 경쟁과 핵무기 생산을 끝내고, 신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달성하고자 한다. 핵무기를 금지하는 것은 핵무기 사용의 재앙적 결과를 주된 동기로 삼고 있는 바, 마찬가지로 핵무기의 생산과 보유를 끝내고자 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핵비확산조약과 완전히 일치하며, 핵비확산조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무엇보다도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를 (불법으로) 낙인 찍을 것이고, 이는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 이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낙인을 찍는 것은 핵무기 보유와 재원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면서 법적, 정치적 지형을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를 '억제력'이나 '안보'의 도구가 아니라 테러, 불안정, 불안의 무기로 이해하는 핵무기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뒷받침할 것이다. 핵무기를 불법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핵무기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며, 국제 사회에서 명망 있는 국가로 보이고 싶어 하는 국가들에게 핵무기를 점점 더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 것이다.


동시에 핵무기금지조약은 또한 핵군축 조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핵무기금지조약은 군축과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 및 현대화를 종식하기 위한 담론의 장과 맥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생산으로부터 재정적 투자 철회를 위한 경제적 자극을 줄 것이고, 군비경쟁 종식과 핵군축의 실제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정치적·법적·사회적 장려책을 제공할 것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은 또한 '과정'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점을 제기한다. 핵비확산조약의 문제는 조약당사

국들, 특히 핵보유당사국들이 공약은 하지만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비핵보유국들은 절충을 하여 합의에 도달한다. 즉, 비핵보유국들은 절충함으로써 절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못한 합의를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다른 약속을 제안한다. 그러나 때때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러한 양보를 강요한 국가들은 그 합의에서 벗어나거나 합의를 재해석해 왔다. 핵비확산조약 제6조, 1995년 중동에 대한 결의, 2000년 핵군축 13개의 실질 조치의 대부분, 2010년 행동계획 중 제5조 및 제21조 모두가 그 사례이다.

해결책은 핵보유국들의 공약 이행을 기다리는 것을 중단하고, 그들이 합의 달성을 좌우하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 특정 국가들이 양보를 강요하고, 그들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식의 패턴이 있을 때,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패턴이 집단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안보에 대한 국가중심적 접근법에서 인도주의적 접근법으로의 변화는 훌륭한 시작이었다.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논쟁은 핵무기가 위험하고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입증했다. 또한 이 논쟁은 군축이 모두의 책임이라는 관점을 강조했다. 이 변화무쌍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장애물이 스스로 움직이길 기다리지 않고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핵비확산조약은 핵무기 폐기라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의 달성을 (핵보유국들이) 조건이 됐다고 느낄 때까지의 무기한 보유형태로 좌초시킬 수 없다. 모든 국가는 핵비확산조약의 정신 및 문자, 재검토회의 결과문서에 반영되어 있듯이 그들의 약속을 이행할 즉각적인 의무가 있다. 핵무기 금지는 그 이행 과정의 일부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비확산조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핵비확산조약이 붕괴된다면, 그것은 핵보유국이 군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한 선택들 때문일 것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달성하고 유지하며, 핵 군비경쟁의 종식과 모든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촉진하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핵비확산조약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다.

핵비확산조약 재검토회의 의장은 2018년에 핵무기금지조약의 채택과 다수의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이 핵무기금지조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무기 금지를 만들어냄으로써 핵비확산조약의 제6조에 따른 효과적인 조치를 대표한다고 주장한 요약서를 발표했다. 요약서는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비확산조약을 보완하며 기존의 군축과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강조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촉구 서명운동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